

관납 실태 재조명 필요

- 가격보다 효율성 중시해야 -

질병차단을 위해 정부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및 소독약품을 지원해오고 있다. 백신 및 소독약품 관납선정시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축산농가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전해년도에 예산을 책정하고 제품선정에 따른 논의를 거친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여러 지자체에서 농가지원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다.

제품보다 가격이 우선

관납제품 선정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제품의 우수성이며 이를 검토할 전문가들이 모여 공정성을 가지고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이 적절한 가격일 것이다.

그러나 제품 효능에 대해 전문가가 필요함에도 관련업계의 수의사나 관계자의 검토도 없이 가격에 맞춰 선정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우수한 제품의 경우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제한된 자금으로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농가들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가 납품가격에 맞추다 보니 저급 소독약이 제품이 선정될 수밖에 없다는 증론이다.

한편 일관적인 제품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 예로 부화장에서 1일령에 사용하는 백신은 병원성이 약한 제품을 사용하는 반면 사육농장에서는 보다





사를 거쳐 조달청을 통해 관납이 이루어져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관납에 따른 비리가 많이 줄어들면서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편법이나 로비를 통한 불공정 사례의 가능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관납사례의 경우 수의계약(경쟁이나 입찰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업체를 지정해서 맺는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병원성이 강한 약품을 사용하게 되지만 이를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원을 받고도 다른제품을 재구매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거시적인 방향을 보고 지원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겠지만 일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유동성을 가지고 조치해 나갈 필요도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관납 뒷거래 개선 시급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관납입찰을 따내기 위해 약품사들이나 유통상인들이 참여하여 관납선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에 대한 로비가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도별 관납형태외에도 제품 수요조

어 약품사의 로비가 빈번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또한 환경개선제의 경우 농가의 요구에 따라 효능이 우수한 제품이 선정되어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뒷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통과정에서의 가격상승

관납로비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양축가에게 직접 공급되는 가격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소독약품이 관납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부 유통상인들이 유통과정에서 많은 차익만을 남기기 위해 저가의 제품을 동물약품회사에 요구하고 약품회사 또한 자사의 유지를 위해 결국 저급 품질의 약품 제공으로 이어지면서 축산업계 전체가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전에 100% 정부지원이 되었던 환경개선제의 경우 50% 자부담으로 전환되면서 농가 동의서가 필요한 중간상인들이 이를 대신 부담하고 허위로 동의서를 받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제품 품질보다 무료라는 생각이 앞서게 되는 농가들은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고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제품의 성능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일부 유통상인들의 이익만 가져다주게 된다는 것이다. 일부지역에서는 제품의 성분과 효과도 불확실한 환경개선제 및 생균제가 지역 우선주 의라는 지자체 사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공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의 관납 실태에 대해서 알면서도 양축가는 무상지원 받는 것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고 회사나 약품점 및 전문가들은 구태여 문제점을 거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관납제품 포장구분 등 문제점 검토를

농가에 지원된 관납제품의 경우 일반 약품과 구분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관과 유통이 편리한 분말 계통의 비싼 소독약의 경우 필요한 타 약품으로 교환해주는 일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납제품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제품과 구분하는 포장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소독약의 경우에도 여러 계통의 소독약 공급으로 농장에서 혼합 사용시 효과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통별(할로젠계, 4급 암모늄계, 알데하이드계 등)로 라벨 색깔을 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관납제품의 경우는 평시 정기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병이 발생할 당시에만 소독약이 집중 공급되다 보니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우리농가에서도 관납 공급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 방역 의지가 점점 결여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

MG 백신 관납 공급의 경우에도 MG 근절과 목적도 뚜렷하지 못하고 기대효과도 없는 데도 무작정 공급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지적하면서 낭비되는 비용을 ND나 추백리 발생으로 인한 보상비 지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올바른 관납문화 정착되길

관납되는 약품은 무엇보다 공정성이 확보되고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선정되어야 한다. 관납은 농가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자금을 들여 공급하여 농가들이 올바른 사양에 도움을 준다는데 취지가 있다. 효능은 무시한 채 가격 및 유통비리로 인해 관납이 이루어질 경우 양계산업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납된 소독약 및 백신 등이 농장에 맞지 않아 쌓여 사용되지 않은 경우 국세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납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자리를 마련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올바른 관납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 | 김영훈 기자
theme6017@hanmail.net

